

“소비지정제주의 원칙 계속 유지한다”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이 글은 大韓石油協會 주최로 지난 4월 15일 충남 道高 호텔에서 열린 제5회 춘계 석유정책 간담회에서 정부·언론계·업계 참가자들이 벌인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토론 참가자

▲李 鳳瑞 (동력자원부 차관)

▲金 泰坤 (동력자원부 석유조정관)

▲李 會晟 (동력자원연구소 선임연구부장)

▲裴 哲洙 (코리아 타임즈 기자)

▲鄭 信模 (서울신문 기자)

▲李 錫九 (중앙일보 기자)

▲金 基萬 (동아일보 기자)

▲全 在浩 (京仁에너지 이사)

▲權 五倫 (湖南精油 상무)

●사회 = 劉 時鍾 (大韓石油協會 부회장)

●정리 = 金 乾洽 (大韓石油協會 홍보실장)

▲사회=방금 鄭信模 기자께서 여러가지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다. 문제점에 대해 솔직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다. 먼저 李會晟 박사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란다.

▲질문(李會晟 박사)=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정유업계에 대해 갖고 있는 反精油的인 시각이 왜 생겼고, 또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지 정유업계에서 한번 survey한다든지 하여 그 원인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번 국제원유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중에 터무니 없는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국민이 석유 가격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제 생각으로는 국민들이 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정유업계에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당초 정유업계가 발족된 것이 메이저와의 제휴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수한 불평등 계약 때문에 국민들이 반감을 갖게 된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업종도 그런 합작관계에서 시작된 것이 많다. 그런데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별로 반감이 없다. 지금 정유업계로 보면 거의 다 민족자본화되었고, 칼텍스만이 남아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 경영진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외국 자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감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개방화를 추구하는 상황하에서는 거의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여기에는 다른 요소가 있을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정유업계에 대해 직접·간접 간여해 왔는데, 그런 정부의 간여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지만 그런 가설이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정유업계가 스스로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분석되지 않는한, 정부가 석유정책을 어떤 식으로 펴든 국민들의 납득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답변(金 泰坤국장)=사실 精油産業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신받는 사태는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과거 수년전부터 이런 문제가 거론됐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지만, 실제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정유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 동자부로서도 책임을 느낀다. 그동안 여러가지 정책 입안과정이라든지 대국민관계에서 명확한 홍보, 폭넓은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어쨌든 그동안 잘못된 점은 스스로 자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전기로 삼았으면 한다.

정부로서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정유업계도 오늘을 계기로 적극적·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 믿는다.

鄭 기자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었는데, 국민들의 불신을 제거 한다고 하여 반드시 정유업계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만 강조해 가지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많다. 鄭 기자가 지적한 바와같이, 정유업계도 에너지절약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하고, 국민들로부터 정유업계가 말로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더욱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질문(金 在浩 이사)=아까 鄭 기자께서 精油産業은 두드릴수록 맛이 난다고 했는데 사실 여자와 명태는 두드릴수록 시끄러워 진다고 하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여자와 명태는 두드릴수록 부드러워진다는 얘기도 있다. 아까 金국장께서는 국제油價 전망과 정부의 대응전략에 관해 말씀하셨고, 李 會晟박사께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油價 전망에 대한 분석을 하셨고, 油公의 趙源天이사께서는 정유산업현황과 입장을 소상히 말씀하셨고, 鄭 信模기자께서는 언론인의 시각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몇가지 질문하겠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몇가지 질문 하겠다.

첫째, 정부의 原油도입선다변화 정책이다. 과거의 다변화 정책지원제도가 생길 때에는 中東의존도가 90%

이상 되었기 때문에 도입선다변화를 위해 非中東 지역인 中南美라든가 아프리카지역에서 도입하는 경우 다변화인센티브와 추가 운임을 보조해 주는 취지에서 생긴 것으로 85년 현재 中東의존도가 57%까지 축소되는 등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 中東정세가 불안하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지도 모르는 차제에 다변화인센티브제도를 없애고, 금융비보조비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의 6차 5개년 계획안에 의하면 에너지성장률이 3.9%, 石油의존도가 42%로 되어 있는데 상황의 변화가 없는 차제에 가격만 내려가는 이 상황하에서 과연 다변화정책을 그렇게 급격하게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유사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걱정이 되어 한 말씀 드린다.

둘째는 石油事業基金 활용문제에 관해 질문하겠다. 基金내용을 보면, 비축·안정·개발로 되어 있다. 안정기금 가운데는 다변화안정기금이 있고, 이번엔 유가조정시 배럴당 1달러 92센트 가운데 1달러 42센트는 에너지안정에 할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금 용도는 석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번 石油事業法 개정때 수정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축산기금의 예를 보면, 소고기를 수입할 때 일정률의 기금을 징수하며, 그 용도는 가축 개량, 증식,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가축 및 사료의 수급조절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石油事業基金을 보면, 비축·안정·개발 기금이 있고, 그외에 석탄산업·電源개발 사업이 있다. 그리고 이번엔 기금을 상향조정하여 나오는 재원으로 산업구조 개선, 기술 개발, 에너지절약 시설등 다른 부문에 뜬겨나가는 것이 많다. 精油産業도 석유수요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시설도 고도화해야 하고, 脫黃 시설도 건설해야 되고, 無鉛휘발유도 만들어야 되고, 기타 정유산업 육성을 위해 투입해야 할 용도가 많다. 그런데 앞서 趙 이사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정부의 관리가격심사 기준에 의하면, 稅前 자기자본의 16.5%, 稅後 9.4%이나, 실제로 정유사들이 향유하는 이익은 명목으로 2%,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8%로서 이와같이 이익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시설고도화와 같은 장기적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저희

정유업계로서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따라서 基金의 용도를 좀더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동자부가 주관하여 기금을 精油産業에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두번째 질문을 드린다.

세번째는 油價構造문제이다. 지난 3.30 油價조정시 B-C油 값은 국제수준에 거의 일치되는 수준까지 내려갔으나, LPG와 휘발유는 국제가격수준에 비해 아직도 월등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휘발유는 사치성 소비역세의 정책 측면에서 보면, 高價유지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LPG 가격은 계속 고가로 가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 현재 우리나라의 LPG 가격은 臺灣에 비해 100이상 비싸고 美國보다는 300이상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이 정책방향에 있어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질문하고 싶다.

▲답변(金泰坤 국장) 鈞 이사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하겠다. 먼저 原油도입선다변화 정책은 현재 시기상조가 아니냐하는 질문이 있었다. 지금 기억이 확실치 않지만, 이 정책은 지난 81년인가 82년에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변화지원제도를 만들어서 中東의존도를 줄이는데 있어서는 이 제도가 크게 공헌했다고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지금 다변화지원제도를 검토한다고 해도 中東의존도를 높이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 中東의존도는 60%선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해 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향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도 변함이 없다. 다만 현재와 같은 油價상황하에서 다변화지원제도를 계속 종전과 같이 지원하는 것이 모순이 있지않느냐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에콰도르의 오리엔테 원유는 中東원유보다 현격하게 싸다. 그러면 정부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조를 한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다변화지원제도를 검토하는데, 이는 다변화지원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油價 체계, 국제석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금과 같은 油價체계가 다시 돌변하여 종전과 같은

油價체계가 형성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제도를 부활해서 中東의존도를 적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다변화 지원정책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다.

다음에 기금활용문제는 옳은 말이다. 일반적으로 비축 기금, 안정 기금, 개발 기금이라든지 石油에 직접관련되는 부문에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법상으로 보면, 石油과 직접관련이 없는 석탄, 電源 개발과 같은 분야에 까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당사자인 精油産業에 대한 투자지원은 왜 안해주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로 답변을 하겠다. 즉 한마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까 鄭信模 기자께서 지적한 바로 그 점이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다. 어떤 점에서는 내가 너무 솔직하게 답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국민이 精油産業을 보는 시각, 이것이 불신을 불식하지 못하는 한, 정유산업에 대해 지원하면 할수록 정유산업에는 더 마이너스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원을 하여 정유산업이 더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원함으로써 정유산업은 더 손해를 보는, 말하자면 국민으로부터 더 불신을 받고, 또 정부가 특혜를 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런 관점에서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石炭산업에 지원하고, 電源 개발에 이 기금을 지원하면서 精油産業이 여기에서 빠져야 되느냐, 이것은 도저히 이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당연히 정유산업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바로 정유업계 내부에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 물론 동자부가 용기가 없다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 국민이 정유업계를 보는 시각이 그러한,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되고 있다.

세번째는 가격구조의 문제인데, 1, 2차 油價조정 결과 B-C油는 지금 어느 나라보다 싼값으로 매겨져 있다. 대신 LPG와 휘발유는 외국에 비해 높다. 휘발유 가격이 높은 이유는 다 아는 바와 같이, 特消稅가 100% 붙어 있어 높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시각의 차이가 있다. 즉 휘발유가 소비성 유종이냐 아니냐 하는데 대해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휘발유가 소비성 유종이라고 봐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LPG는 과거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있다. 이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 이것은 정부로서도 알고 있다. 그래서 LPG를 대폭적으로 내리는데 따른 제약요인이 제거되고 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값을 내릴 것이다. 값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앞으로 LPG가격에 대해서는 다른 유종과 구조가 맞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하향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질문(裴哲洙 기자) 마지막으로 鄭信模 기자께서 精油産業에 대한 국민의 불신문제를 언급했는데, 결국 이러한 불신은 李 會晟박사가 지적한 바와같이, 가격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본다. 정부가 직접 油價를 정하는 한 국민의 불신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불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油價를 시장메커니즘에 맡길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격자율화에 대해 정유업계가 들고 나오는 것은 환율연동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동자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李 鳳瑞차관께서 답변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업계에 대해 묻겠다. 앞으로 油價자율화가 실시될 경우 우선 국내석유시장의 신규참여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최근 산유국의 압력이 늘어나고 있는 제품도입문제에 대해 이 차관과 업계에서 답변해 주기 바란다. 또, 이 자리에 이론에 밝은 李 會晟박사가 나와 계신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韓國의 精油産業으로 볼때 앞으로의 전망은 결코 밝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국내에는 5개 精油社가 있는데 소위 규모의 경제는 어느 수준이라고 보는지 이 점에 관해 듣고 싶다.

▲사회=제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차관께서 도착하셨다. 박수로 환영해 주기 바란다. (박수)

▲답변(李 鳳瑞차관)=늦게와서 죄송하다. 서울에서 떠나기는 오후 3시에 떠났는데, 오다가 고속도로상에서 도로보수관계로 1시간 반을 기다리는 바람에 계획보다

1시간 반이 늦었다. 그렇지만 앉았더라면 제가 세미나의 중간 정도에 와서 돌아가는 분위기도 보고 참여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부터도 우선 섭섭하다. 듣고 보니까 이 세미나가 2시 정각에 시작해서 벌써 6시 20분이 되었으니까 4시간 이상 장장 토론하시는 모양인데 그나마 제가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油価에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지부가 발족한 이래 여러차례 검토해 왔다. 궁극적으로 油価가 자율화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느시점에서 실시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油価의 자율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묻는다면 우선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업계도 그렇고, 아무도 지금 油価를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이 나의 느낌이다. 油価를 자율화하겠다고 할 때 우선 언론부터 그것을 잘했다고 할 것 같지 않다. 언론이 일반적인 국민의 감정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생각할 때 정유회사가 油価를 임의로 결정하도록 방치했을 때, 그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호응할 것이냐 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정부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또 업계는 업계대로 현재와 같이 잉여시설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油価의 자율화를 원하는가. 사실상 油価자율화는 얘기는 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완전한 油価자율화는 아니더라도 환율과 연동하여 신축성을 도모하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중간해결책 정도가 되는 案인데 사실상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환율과 연동하지 않은 적이 없다. 다만 타이밍에 있어서 그때 그때 어느 정도의 시간의 차를 두고 연동시키느냐 하는데 대한 의견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 모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 후, 석달 후로 늦어지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늦어져서 시차를 두고 연동시키는 것이. 업계의 불만이라면 그것은 이해될 수 있으나, 그동안 연동이 안된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 연동을 해서 油価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환율이 오르면 가격을 빨리 조정해 달라는 얘기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그때 정부가 빨리 가격을 정해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또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실상 환율이 오를 때 그때 상황 나름대로 전체의 물가를 보다 보니까 여기서 다소 시차가 생기는 것 뿐이지 궁극적인 조정은 계속해 왔기 때문에 환율에 연동한다는 것은 다소 편의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인 해결방안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어느 정도 정부가 가격의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은 환율을 반영하는 타이밍문제도 조정하는 정부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油価자율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체제가 변경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또 두번째 질문인 신규참여라든가 제품수출입은 업계가 얘기하는 消費地精製主義 원칙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 이 원칙에서 다소 양보할 필요를 느끼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는데, 사실 질문은 먼저 시장 자율화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문제이다. 油価가 자율화되면 소비자정제주의가 완전히 현재의 체제보다 다르게 양보해야 할 마음의 준비가 될 때 비로소 유가자율화가 가능한 것이고, 또 소비자정제주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정부나 국민이나 업계 스스로도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 기능을 정부에 두고,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옳지않느냐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사항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결국 시장가격의 조정은 어느 정도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번째의 그 대답도 거의 자명한 것 같다. 소비자정제주의의 원칙 자체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日本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동안 소비자정제주의를 지켜오다가 최근 산유국의 제품수입압력에 어느 정도 양보해서 상당한 물량을 수입하고 있다. 다소 소비자정제주의를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을 두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비자정제주의를 완전히 후퇴한다면 우선 油価의 구조차체 그리고 수출입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국제유가와 연동시킬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질때 비로소 가능한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또 소비지정제주의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精油産業에 들어오는 Entry자제도 마음대로 열어 줄 수 없는 것도 자동적인 귀결인 것 같다. 정제시설 능력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시설을 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한, 정유업체가 어느 정도의 이윤을 향유하면서 운영돼 갈수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느 정도 가격통제를 하면서도 정부가 책임을 느끼고 있는 시설이 적당히 운영되고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정이윤을 업체가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또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느끼는 그러한 양면성을 가진 제도가 현재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 당분간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생각한다.

▲사회=李 박사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답변(李會晟 박사)=차관님, 喪哲泚기자가 저더러 이론에 밝다고 했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제가 현실에 어둡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모두 웃음)

규모의 경제에 관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체에서 보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서는 60년대에 정유시장이 확대되는 그때에는 약10만 배럴이 경제성이 있는 규모라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시장 규모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얘기한 10만 배럴의 규모가 과연 지금도 규모의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는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요새 신규로 정유공장을 짓는 업체들이 東南아시아에 약간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규모의 경제가 얼마인지 간단히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업체에서 이 방면의 정보를 갖고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면 고맙겠다.

▲사회=우리 업체를 대표해서 權五倫 상무께서 말씀해 달라.

▲답변(權五倫 상무)=현재 정유공장을 짓는 규모라는

것이 상압증류장치 기준으로 10만~15만 B/D이다. 이것은 나라마다 소비규모, 기존시설의 규모, 시장성등과의 상관관계하에서만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특성을 배제하고 단편적으로 일반론을 전개한다고 하면 아직도 15만 B/D수준이 하나의 규모의 경제단위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해달라. 지금 6시반인데 마지막으로 한분 더 해달라.

▲질문(權五倫 상무)=제가 한가지만 여쭙어보겠다. 언론기관을 통해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고, 또 듣는 얘기도 있고, 현실도 그렇고 하여 의문이 가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LPG가격문제이다. 실제로 가스라는 것이 텍시에 쓰는 부탄을 제외하고 프로판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도시가스에 공급하는 가스가격과 일반가스가격과는 약 40%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가스에 공급하는 LPG가격이 싸고, 일반용으로 공급하는 LPG 가격은 비싸다.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는 대단위 공급지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재 대단위 공급지역이라고 하면 아파트 밀집지역이 근간이 되고 있다. 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다. 역설적으로 보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싼값으로 공급하고, 容器에 담아 공급되는 비교적 소득이 낮은 변두리나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는 비싼 값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정책적으로도 다소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도시가스 가격을 공장용의 경우 더 저렴하게 인하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산업용 LPG가격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또한 이상한 일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된다. 차제에 가스 가격체계를 고소득층에게는 높게, 저소득층에게는 낮게 책정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지... 정부에 여쭙어 보고 싶다.

▲답변(金泰坤 국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LPG공급 가격은 일반용과 도시가스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그 차이는 지금 權 상무께서 말한 40% 정도는 아니고, 아마 25% 정도

도시가스용이 쌀 것이다. 도시가스용 LPG가격이 낮게 책정된 배경은 이렇다. 당초 도시가스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제조 공급되었다. 도시 가스가격은 모두 시도지사가 정하고 있는데 시도지사가 모두 서울지역의 나프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나프타가 아닌 프로판을 원료로 하고 있는데도 가격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준용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의 도시가스를 보면, 값싼 나프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실제로 도시가스공장은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공장은 얼마 되지 않고, LPG가 더 많다. 그런 점에서 도시가격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LPG가격을 낮춰줘야만 현재 도시가스요금으로 받는 것을 맞출 수가 있다는 배려가 하나 있었다. 또 한가지는 현재 도시가스가 초창기인데 초기투자비가 막대하다. 그것은 배관망을 깔아야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다. 이와같이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간의 보조가 필요하다. 또 궁극적으로는 가스정책에 있어서 도시가스가 갈 수 없는 곳은 LPG로 공급할 계획이다. 결국 도시의 도심지는 모두 도시가스로 공급하고, 농어촌지역은 LPG로 공급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율이 아주 낮다. 이것을 빨리 이룩하기 위해서는 확대해야겠는데, 그러면 확대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무엇이나, 또 확대하려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등 이상 세가지 요소가 배려되어 도시 가스가격을 다소 낮게 책정하고 있다.

권상무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소득층에 싸게 공급하고 저소득층에 비싸게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이율배반적인 면도 없지않으나, 이것은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일반가정에서 가스를 쓰려고 하면 배관비가 또 들어간다. 최소 30~40만원의 투자비가 들어간다. 이와같이 가정이 부담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도시가스가 반드시 쌀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 도시가스는 지금까지 원료로 공급하던 LPG로 하지 않고, 전부 LNG로 대체할 계획이다. 따라서 도시가스 가격은 앞으로 LNG가격이 결정되면 그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다.

또 도시가스 가격을 가정용과 공장용에 왜 차등을

두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현재 실제로 업계에서는 스스로 산업용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 체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도 역시 원래 도시가스는 공급하는 목적이 가정용이다. 가정에 대해 도시가스를 공급하자는 것이지, 배관을 해가면서 그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공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용 수요를 창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아주 더디다. 이렇게 더디기 때문에 도시가스 회사가 견딜 재간이 없다. 따라서 수요가 많은 공장에 대해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공장에 대해 신규수요를 창출하려다 보니, 여기는 또 대량으로 쓰기 때문에 다소 혜택을 주어야 가능하고 또 이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장용과 가정용에 차등제를 실시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日本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경우는 가정을 100이라고 하면 공장은 6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공장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의 가스는 LPG, 나프타,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LNG가 하나의 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돈상태를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가스 가격체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검토과정에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모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질문(李鳳瑞 차관) = 제가 업계에 한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으로 LNG가 들어오고, LPG는 LPG대로 있게 되는데 LPG와 LNG는 어떤 원칙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본 것이 있는가. 아까 권상무님이 질문하는 것을 미루어 보건데 LPG를 산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배관망으로 공급되는 것은 물론 LNG로 가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LPG는 배관망으로 공급되지 않는 곳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가스산업체가 살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權五倫 상무) =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 (웃음)

▲질문(李鳳瑞 차관) = 앞으로 정유업체가 LPG 마케팅에 관해 신경을 많이 쓰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LNG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싫든 좋든 日本의 경험을 참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日本의 경우를 보면 전체가스수요의 80%정도는 LNG로 충당하고, LPG는 20%정도밖에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개 배관망으로 공급하는 것은 LNG로 하고, 배관망비용이 안드는 부분이 LPG시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면 듣고 싶다.

또 하나 언론계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석유비축정책이다. 油價가 하락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석유수급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여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지금부터 비축을 해야 할 것인지, 했던 것을 털어야 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 뭐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언론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많이 참고가 될 것 같다.

▲답변(裴哲洙 기자) =李 차관께서 지난번 東京에서 열린 국제에너지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비축은 정부주도로 빨리 해야한다고 주장하셨던데……

(모두 웃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세미나에 오면서 고속도로상에서 1시간 반정도 지체하면서 생각한 것인데 현재 어느정도 비축이 되어 있느냐 궁금했다.

정말 그와 같은 비상상황하에서 조금만 차량들이 밀리면 그런 교통지옥을 연출하게 된다. 가상으로 유사시라 생각할 때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다. 이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넘어서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비축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쉬운 말로 손해를 보아야 얼마나 보겠는가. 비축은 지금부터 비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변(鄭信模 기자) =저도 같은 생각이다. 지금 李 박사께서 국제원유가격 전망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유가격 전망은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맞아 본 적이 없다. 과거 두차례의 석유파동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고 혁명이나 전쟁과 같은 정치적인 변수에 의해 빚어진 것이다. 대개 전문가들의 예측은 이와 같은 정치적인 변수는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석유비축은 가장 바닥시세에서 사 넣은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요즘이 가장 바닥시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느낌인 것 같고, 더구나 비축을 하기 위해서 새로 돈을 어디서 댈 온다든가 마련해야 한다든가 하면 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으나, 어차피 비축기금이 현재 4천억원 정도 적립돼 있지 않은가. 지금이 비축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답변(李錫九 기자) =저도 비축문제에 있어서는 동감이다. 우리가 일단 바닥시세라고 생각하여 물량을 잡으려고 할 때는 이미 오를 때이다. 아까 趙源天 이사께서도 배럴당 10달러짜리 원유도 샀다고 하셨는데 이 10달러가 바닥시세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만약 10달러에 도입했는데 다시 5달러로 떨어졌다고 하면 언론에서는 왜 그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10달러에 샀느냐고 공격하겠지만……

(모두 웃음)아무도 정확한 바닥시세는 알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증권시세 처럼 오른다 하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그때는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축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답변(鄭信模 기자) =얼마 전 제가 崔昌洛 동력자원부장관께 여쭈어 보았더니 장관은 Risk-taking 을 말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싼 값으로 사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상론이지 어려운 일이 아닌가고 물은 적이 있다. 어차피 동력자원부가 에너지 문제에 관한 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니가 정부가 판단하여 바닥시세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소한 동력자원부 기자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위에서 쓰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 쓰기는 하지만…… (모두 웃음)

▲질문(李鳳瑞 차관) = 앞으로 정부가 비축을 하여 좀 틀리면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솜방망이고, 실질적으로는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답변(鄭信模 기자) = 저희는 바다시세에서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 하니까…… (웃음)

▲사회 = 시간이 예정보다 많이 지났지만, 한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질문(金基萬 기자) = 이것은 질문은 아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 표상에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다. 지금 精油社들이 재무구조 문제를 강조하고, 80-85년의 경우를 보면 자기자본금 규모가 944억원에서 3,830억원으로 4배나 늘어나고, 그동안의 이익은 302억원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자기자본이익율이 마이너스 0.8%라고 극한적인 말도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자기자본은 어떻게 늘려 왔는지 이 자료에서는 그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것은 상당히 의문스럽다. 나중에라도 그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기 바란다.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으면 精油社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납득이 안간다. 또 정유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나쁘기 때문에 동력자원부로서는 基金 활용문제에 있어서 정유업계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유업계와 함께 정부도 반성하고 방향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정유업계에 대한 국민의 나쁜 인식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정부가 精油社에 조금이라도 관계하면 정부까지 그 결백성이 더럽혀진다는 도덕적인 인식인데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다소 잘못된 인식이라도 앞으로 정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솔선해서 신경을 써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유업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물론 정유업계도 노력하고 그동안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언론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역시 정부도 이제는 과감하게 그런 정책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결백성만 강조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답변(金泰坤 국장) =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아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되풀이해서 말하겠는데, 京仁에너지의 全在浩 이사께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 石油事業基金을 쓰는데 있어서 석탄이나 電源개발과 같이 石油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문에까지 지원해 주면서 石油와 직접 관계가 있는 精油產業에 대해서는 왜 지원해 주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답변했다. 지금까지 정유업계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좋지 않다. 지금도 정유업계에 대한 불신이 깊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유업계의 근본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등의 얘기가 오고 갔다.

즉 국민의 시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유사에 대한 지원이 또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고, 精油社가 일부 지원을 받음으로써 더 곤경에 처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정유사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정책부터 선행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 정유업계가 국민의 불신을 씻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에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제가 石油局에 부임한지도 2년이 돼가지만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얘기한 사항이다. 그러나 그동안 특별한 진전이 아무것도 없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것을 좀더 촉구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精油產業이 도와달라고 하는 분야가 무엇이냐고 하면 주로 크래킹 시설이다. 그러면 크래킹시설은 현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검토시기를 좀더 늦춰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문제만 제기했다.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크래킹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로서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크래킹 시설투자자금은 당장은 필요한 자금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다.

▲답변(李鳳瑞 차관) = 정유업계도 객관적으로 보아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할 때는

정유업계도 기금 사용대상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지금 金 국장이 얘기한 것에 나도 생각을 같이 하는데, 크래킹 시설에 관해 업계에서는 현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 정유 5사 중 極東石油가 제일 먼저 크래킹시설을 건설하고 있는데 나머지 4社가 크래킹 시설을 하게 되면 과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어느 한 회사를 선정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 그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중의 하나이다. 또 같이 안하기도 어렵고, 같이 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재 정유사의 입장이 아닌가 본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는 과제이며, 정부와 업계가 계속 의논해야 할 사항이다.

▲사회=이상으로 질문 토의를 마치겠다. 끝으로 차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답변 (李鳳瑞 차관)=이 간담회는 이번까지 다섯번째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계신 분 중에는 오늘이 첫번이 아닌 분도 계시고, 처음이신 분도 계신데, 저는 이 세미나에 올 때 마다 이 세미나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한다. 평상시에 사무실에서 언론계에 계신 여러분이나 업계에 계신 분들과 당면문제에 관해 얘기를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때 그때의 단편적인 것으로 체계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한번씩 세미나를 하면 우선 그 당시의 분위기로써 문제가 되는 것을 모두

체계적으로 나열하여 되짚어 보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또 사무실을 떠나 이러한 제 3의 장소에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모르겠다소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듣지 못하던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것 또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오늘도 사실은 이 세미나에 처음부터 참석하고 싶은 생각은 많았으나, 사정이 있어 좀 늦었다.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를 해마다 이렇게 되풀이해 나가노라면 그 효과는 크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石油協會·업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이 분위기를 기본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동력자원부 출입기자단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고맙다.

▲사회=바쁘신 가운데도 잠시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써 무사히 끝나게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이번 간담회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를 발표해 주신 네분의 연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간담회가 진지하고 격의없는 토론으로 과거 어느때 보다 가장 내실있는 간담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오늘 이 간담회가 정부, 언론계 그리고 업계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좋은 계기가 되어 줄 것을 바라 마지 않는다. 아까 鄭信模기자님 그리고, 李會晟박사, 金국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協會가 정유업계와 협의하여 정유업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오늘 간담회를 이만 마치겠다. ☐

절약하는 국민앞에
석유파동 피해간다